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다케시마)’ 표기 실태와 대응

손용택*

Dok-do(Dakesima) on the Textbook of Japan

Yong-Taek Sohn*

요약 : 모든 일본 교과서와 지리부도에서 독도(다케시마) 관련 내용(또는 지도)을 다룬 것은 아니다. 중등용의 모든 지리부도에는 일제히 독도를 일본령 죽도로 표기하였다. 일부 출판사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쟁점화 하여 다루고 있다. 쟁점의 내용은 독도가 한-일간의 영유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근거하면 독도는 일본령이라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일본 우익의 입장에 선 출판사와 저자들의 주장은 단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간에 쟁점화 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느끼는 하지만 학문적 노력과 설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요어 :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독도(죽도) 표기, 국제 상호 이해

Abstract : The Dok-do-related issue hasn't been addressed in every Japanese textbook and atlas. In all Japanese geography 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Dok-do has been marked as Juk-do which is a territory of Japan. It was treated as a hot issue in several political & economical textbooks compiled by different publishing companies. The point at issue is that Dok-do belongs to Japan, even though it is a disputed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ssertion of Japanese right-wing organizations especially seems resolute. The solution to the Dok-do issue, which has been a disputed point between Korea and Japan, needs a varied approach. It may be possible to solve it through scholarly endeavor and persuasion.

Key words : Dok-do dominium, Japanese textbook, marking of Dok-do(Juk-do), international mutual understanding

I. 서론

일본은 역사왜곡 뿐 아니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국제사회에 물량적인 홍보공세를 취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화 하려는 극우적, 제국주의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이래 ‘독도 영유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¹⁾.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을 주장하면서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위탁 제소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를 침탈하려 하고 있다. 학문은 진실과 진리를 밝히려는 작업이며, 따라서 실증자료들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때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진실을 알면서 1905년 독도를 우리 국민들 몰래 빼앗아 일본 영토로의 편입을 시도했다. 오늘날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ohn@aks.ac.kr

의 일본정부는 이를 기정 사실화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비판되어야 한다.

과연 그들 교과서에서 독도 표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여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교과서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도 표기가 일본 교과서상에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가를 살핀 문헌연구이다. 둘째, 독도 표기의 실상을 알기 위해 독도 표기가 나타날 만한 일본의 교과서류를 모두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즉,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과(역사, 지리) 교과서 및 지리부도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교과서상의 표기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방향과 주제를 명백히 하기위해 관련문헌을 참고하거나 일본측의 보고서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교과서류에 나타난 독도 표기문제를 놓고,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언의 형식을 빌어 결론으로 담고자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좀더 많은 교과서를 다룰수록 실상파악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자료구득의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매우 오래된 교과서에서부터 최근의 것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II. 정확한 영토표기와 상호 국제이해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구를 하나의 촌락이나 도시마을로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국가간의 거리를 단축시켰으며 이로써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서로 이해하고 평화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유네스코에서는 국제이해, 국제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에 세계 각국이 힘써 줄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나라가 학교 교육속에 국제이해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이해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 중의 하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상대 국가, 상대국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본 요건은 국제사회에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

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이해 교육에서 중요한 매체가 되는 교과 과목은 사회과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분야가 가장 많이 외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및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 형성은 6세에서 14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 중등학교에 재학시기 이나이에 학교생활과 특히, 사회과 분야의 수업을 통해 외국에 대해 배우게 된다. 사회과 교과서가 외국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위치, 영역, 지명과 관련한 외국교과서의 서술량은 적고 지극히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서 한국의 수도명, 주요 도시명, 국경선의 표시 등에서 오류가 자주 발견된다²⁾. 오류의 정도가 심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남북한 명칭을 혼동한 경우
- 남한의 수도를 평양으로 제시한 경우,
- 휴전선을 38도 선으로 표시한 경우,
- 주요 도시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경우,
- 주요 도시명을 일본식으로 병기한 경우,
- 대한해협을 일본식 명칭으로 표기한 경우,
- 독도를 일본 영토로 나타낸 경우,
- 제주도의 명칭을 서양식으로 제시한 경우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들이 특정국가의 특정교과서 속에 무더기로 나타나는 까닭은 이들 교과서 저자들이 일본측 자료나 낡은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참으로 중대한 문제들이 아닐 수 없다³⁾.

영토는 주권이 미치는 장소이고, 장소는 움직일 수 없는 불박이 지역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다. 고장과 마을, 도시, 지역사회, 국가 등, 크기와 행정 소속은 각기 달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땀과 삶의 애환이 서린 생활터전이고, 문화와 정서가 녹아든 캔버스이다. 이러한 캔버스의 크고 작은 문화상에 붙여진 주소와도 같은 것이 곧 지명일진대,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기해야 하고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III. 일본의 교과서 및 지도에 보이는 '독도' 표기 현황

1.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모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도를 죽도 또는 다케시마로 표기해 놓은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정(학습요령) 상 다루는 주제가 아니거나 워낙 작은 섬이므로 축척 관계상 교과서에 게재되는 지도상에는 나타낼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⁴⁾.

2. 고등학교 지리부도

일본의 각 지리부도에는 모든 책들에 걸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한일 국경선 통과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는 의당히 일본령 죽도(竹島)로 표기하고, 한반도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일률적으로 조선반도로,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⁵⁾.

3.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

일본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국제문제를 다루는 내용에 지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분명히 다룬 교과서들이 눈에 띈다⁶⁾. 동원서점(桐原書店, 평성15년, 野中俊彦 외, 71쪽)의 신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국제분쟁과 민족문제를 다루는 내용 가운데 죽도를 지도상에 표시한 후, 일본과 한국정부에서 공히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괄호 속에 적고 있다⁷⁾.

한편, 삼성당(三省堂, 정치·경제, 개정판, 2002년, 93쪽, 永井憲一 외 6명)에서 간행한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에 죽도와 대마도를 표기한 지도를 게재한 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죽도(한국과 계속 분쟁 중): ① 일본의 1905년에 도근현(島根縣)에 편입시켰고, 이후부터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되었다. ② 1946년의 연합국 군총사령부각서에 의하면 일본의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했지만, 이것은 점령하의 협정조치인 것이고, 죽도를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모든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죽도는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52년에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경계범위 내에서의 일본어선의 어로활동을 금지시킨 구역에 죽도가 포함되었지만, 일본정부는 죽도가 일본영토임을 항의했다. 이후 양국간의 분쟁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에도 죽도의 귀속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현안문제로 남아있다.

위의 내용은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SCAPIN 제 677호와 대일강화조약, 그리고 이승만 라인 등에 관한 내용의 요점을 일본 측의 해석방식대로 요약하여 교과서에 기술해 놓은 것이다. 왜 일본 교과서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음 내용을 상고함으로써 밝혀볼 필요가 있다.

1)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러시아와 일본은 1904년 2월 10일 선전포고와 함께 전쟁에 돌입했다. 일본은 대량의 군대를 한반도에 상륙시키고, 동해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망루 설치의 후보지를 찾던 중에 독도를 마땅한 후보지로 정하고자 하고 있었다. 연해주와 한반도 각지에서 감치잡이를 하던 일본의 어부 나가이(中井養三郎)가 독도(리앙꾸르 섬)에서의 '어업독점권'을 한국정부에 교섭하여 줄 것을 일본정부에 청원한 바 있다. 이때, 독도가 한국영토이지만 무인도인 이것을 이 기회에 침탈하여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음모가 망루 설치를 준비하던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 중심으로 시작된다. 이들 음모에 따라 나가이가 제출한 대하원(代下願)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고 빌려 줄 것을 청원하는 대하원"으로 바뀌어 일본의 내무·외무·농상무성에 다시 제출된다.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독도(리앙꾸르 섬)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내각회의를 거쳐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관내 고시하도록 훈령하였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독도를 '죽도(竹島)'로 명명하여 시마네현 오끼(隱岐)섬 소관으로 정한다 '고 고시하였다. 이것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이다⁸⁾.

여기에서 첫 번째로 부당한 점은 시마네현 고시를 국제법상 합당한 고시로 볼 수 있는가?이다. 영토의 선점이나 편입은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한국이 선점한 땅으로서 울릉도와 함께 오랫동안 관리하여 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간에 400년간의 공도정책이 있었지만 이것도 곧

영토관리의 한 수단이며, 결코 영토의 포기의 기간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 영토선점이나 편입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었는가?이다. 당시의 경쟁적 주권자인 조선정부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고하였는가?이다. 1905년 1월 28일 각의를 거쳐 동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 지사의 이름으로 고시되는 일련의 과정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1928년의 팔마스 섬, 1931년의 클리퍼튼섬의 판례를 들고나와 “통고를 영토취득의 절대적 요건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을 한다. 그러나 이들 섬에 통고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동 섬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국의 은밀한 주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지 독도와 같이 격리된 무인도의 편입에도 해당되는 판례는 아니다. 일본은 이것을 일개 작은 지방의 현(縣)을 통해 고시했고(1905년 2월 22일), 고시한지 일년이 지난 1906년 3월 29일에야 시마네현에 속한 오키도(隱岐島)의 관리 일행이 독도를 순찰하고 돌아가면서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에게 통고한 것이 전부이다⁹⁾. 선점 관리되고 있는 남의 영토를 이런 식으로 탈취하여 나중에 서둘러 현지측량하고, 토지대장에 올리고, 강치어 포획의 면허를 시행하는 등 침략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가 경쟁상대자인 조선정부에 1년 후에야 소극적으로 통고되었고, 일본정부의 관보에도 게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많은 일본사람들에게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셋째, 일본의 독도 침탈은 어떠한 환경하의 한일 관계 속에서 자행되었는가?이다. 1910년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 한낱 형식적인 통과절차에 불과할 뿐 19세기 말부터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지배하에 놓여있었다. 러일전쟁이 일본 승리로 끝나자 한반도에는 강대한 일본의 군사력이 주둔하게 되었고, 1905년 11월 17일에 대한제국의 외부 통로를 완전히 폐쇄시킨 채 외교권을 빼앗고, 다음해 2월 1일부터 통감부가 우리의 외교와 내정 일만을 감독 지배하면서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우리는 국권이 송두리째 침탈당하는 판국이였기에 독도영유를 문제삼을 힘도 없거나와 외교전을 전개할 통로도 없었다. 일본정부는 교활하게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 통치를 완벽하게 마련한 다음, 독도영유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를 한국 측에, 그

것도 울릉군수에게 통고한 것이다.

2) SCAPIN 제 677호와 대일강화조약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판정한 근거 기원은 일찍이 카이로선언(1943년 11월 20일)으로 까지 소급된다.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고 패전 후 일본영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탐욕과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것’에 해당된다¹⁰⁾.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미, 영, 소의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수락함과 동시에 포츠담 선언 제 8항에 자동 흡수된다. 8항의 내용은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는 내용이다. 독도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우리들(3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포함되며, 이것이 1945년 9월 2일 일본이 조인한 항복문서이고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즉시 포츠담선언의 제 규정을 집행하기 시작한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위와 같은 원칙 하에 1945년 9월부터 5개월간 연구, 검토 끝에 이른바 SCAPIN(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를 결정, 발표한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원 소속으로 반환해야 할 영토를 규정한 것인데, 제677호 제3항에는 일본으로 귀속될 섬과 제외될 섬을 명기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제 3항 A에 분류되어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한국영토로 결정, 발표되어 일본 정부에도 통보되는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령이 하달된 것은 1946년 1월 29일이다. 그리고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는 독도 12해리 이내에 일본의 선박이나 승무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고, 1952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 전혀 수정되거나 폐지된바 없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연결된다.

연합국은 제2차대전의 강화조약 체결준비를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1950년에는 극비리에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초안하였다. 여기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도서를 완전 한국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하고, 그 도서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강화조약 초안은 5차 초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다. 6차 초안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맹렬한 로비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일

본정부 고문 시볼트(Scbald W.J.)가 독도를 일본으로 귀속시키고 미국의 기상관측 및 레이다기지로 사용하도록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독도 영유의 분쟁 발단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국무부에 시볼트가 건의한 내용은 독도는 한국 근해의 섬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오래되었고 타당하다는 것, 지금까지 시마네현 오키섬의 도사(島司)가 관리하고 있었던 섬이라는 것, 한국의 이름이 없고 한국영토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는 것, 장차 미국의 기상관측소와 레이다기지 등 전략적 이용가치가 크다는 것 등등이다¹¹⁾. 제6차 초안은 이상과 같은 주석이 첨가되어 독도를 일본 영유로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종전의 초안과는 판이한 것으로 변화였는데, 이때는 마침 6.25 발발로 한국정부는 정신이 없을 상황이었다.

제 6차 초안이 여기에 이르자 초안 작성의 주역이었던 미국에 대한 항의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으로부터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영국과 미국 합작품으로 대일강화조약 제2조 제1항이 1951년 6월 14일에 완성된다. 내용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로 되어있다. 여기에 일본영토의 내용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 제1항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독도영유의 불씨로 남게 되었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SCAPIN 제677호에 이르는 일련의 각국 논의 결과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인 것을 아무도 부정함이 없었고, 대일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 것이 1951년 9월이고 일본이 재 독립한 것은 1952년 4월이므로 만약 독도가 일본의 영유라면,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의 독립국 승인을 일본의 영토위에 승인한 아이러니와 다름이 없다.

4.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의 일본사 또는 세계사 교과서에 사용된 지도라면 고대사 또는 중세사, 근세사 지도에 바다이름과 울릉도, 독도 등이 표시될 수 있다(대축척지도일 경우). 그러한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역사 교과서 세권을 택해 자세히 검토하였다¹²⁾. 그러나 세 권의 역사 교과서에는 시대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주제의 지도들이 망라되고는 있지만, 울릉도나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동해에 대해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들은 세 권 모두에서 여러 컷 발견된다¹³⁾.

5. 중학교 사회과 역사분야 교과서

소화시대의 중학교 사회과 역사분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지도와 지명을 살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동해 또는 독도가 표기된 지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소화 53년과 54년의 중학교사회 역사분야 교과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살필 수 있는 정도이다¹⁴⁾. 일본서적(日本書籍)에서 발행한 교과서에는 일본측에서 한반도 남부에 근거 없는 ‘임나일본부’ 설을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남부지방의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임나제국(任那諸國)’을 표시한 지도가 등장하기도 한다¹⁵⁾.

일본의 교과서에서 한반도를 ‘조선반도’로 표기하고, 북한을 ‘북조선’으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것이 상례이다. 간혹 남북한을 합해서 ‘한국(韓國)’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이례적인 표기이다¹⁶⁾.

집중적으로 검토한 교과서들에서 ‘독도(죽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본측의 의도라기 보다는 교과서 판형과 스케일상의 문제, 그리고 당시 교과서에서는 ‘쟁점화’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중학교 역사분야 교과서의 ‘독도’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일본 역사교과서에서의 독도표기 상황은 이렇다 치고, 우리나라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게재된 독도관련 내용에 대해 일본 측에서 해석한 내용을 주목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그들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하는 섬으로서 일찍이 우리나라(조선)의 영토였다.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은 본토에 이주시켜, 일시 정부의 관리가 소홀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거점으로서 활용해 왔다¹⁸⁾. (교육인적자원부, 1996, 중학교 국사, p.240)

이에 대한 일본 측의 해석이 매우 괴이하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국사교과서상에 나타난 위의 내용에서 “조선사람들을 본토로 이주시켜서 일시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적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괴이하게 해석하여 물고늘어진다. 즉, 관리가 소홀했던 적이 있는 섬을 독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울릉도에 관한 내용

으로 보고 있다. 즉, 조선시대 초기 1417년에 한국 정부 즉, 당시 조선정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그 이후 울릉도에는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空島)정책'을 취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조선)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거점으로서 활용해 왔다"라는 서술도 틀렸다는 것이다. 일찍이 1882년과 1900년의 두 번에 걸쳐서 한국(조선)측이 울릉도에 조사를 행하였지만 그때에 한국(조선)에서는 죽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며, 19세기 말에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독도(죽도)를 놓고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거점으로서 활용해 왔다"고 기술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일본 측은 해석하고 있다¹⁹⁾.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고 있던 안용복이 여기에 왕래하는 일본의 어민을 추방하고 일본에 건너가 우리나라(조선)의 영토인 것을 확인시킨 적도 있다. 그 후에도 일본의 어민들이 가끔 울릉도 부근에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울릉도에 관청을 두고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고 독도까지 관할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해 버렸다²⁰⁾. (교육인적자원부, 1996, 중학교 국사, p. 240)

위 문장에서 '여기'는 우리나라(조선)에서 '독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안용복이 '독도'에 왕래하는 일본인을 쫓아내고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일본측에 확인시켰던 것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측의 해석은 이러한 진술은 허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로서 일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17세기 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울릉도의 영유권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고, 조선의 공도정책 때문에 일본인이 울릉도를 어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본 측은 일본령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섭의 결과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인이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고 조선령으로 인정했으며, 이 울릉도 영유권 문제의 시기에도 독도 영유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일본인의 독도(죽도)도 항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 영유 문제에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관계하는 것은 사실이며, 안용복이 두 번 일본에 건너 왔는데 첫 번째(1613년, 원록 6년)는 울릉도의 침입자로서 일본인에게 체포되어 호송, 송환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1696년, 원록 9년)에도 울릉도에 건너갔을 뿐 독도(죽도)에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의 도항 후에 안용복은 울릉도로부터 일본인

을 추방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일찍이 막부에 의한 울릉도 도항 금지령 후에 울릉도에 일본인이 있을 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본 측은 안용복 증언 자체가 과장된 것이며, 그 증언에서도 안용복이 일본인을 쫓아냈다는 것은 울릉도로부터였지 독도(죽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²¹⁾. 즉, 일본측의 억지 주장의 골자는 이렇다. 대한민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울릉도'라고 써야 할 부분을 '독도'로 바꿔 서술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6. 중학교 공민 교과서

고등학교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국제간의 분쟁 주제로 독도를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중학교의 공민교과서에 비슷한 내용을 다룬 단원에 영토분쟁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중학교 공민 교과서 5종을 택해 살펴보았다²²⁾.

제국서원 발행의 교과서에서는 국가와 영토문제를 다룬 내용에서 주권, 국기, 국가, 영토, 국가간의 존중 등을 주제로 서술하였다. 칼럼을 마련하여 '일본에도 있는 영토문제' 제하에 북해도의 북방영토 묘지 참배단 사진과 함께 명치시대부터 일본의 영토였던 북방 4도에 관한 내용을 싣고 중국과 일본 양국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적고 있다. 독도에 관한 내용은 없다.

동경서적 간행의 「신 사회 공민」교과서 같은 절에는 지구시민으로 함께 중시하여야 할 주제들로서 환경, 인구와 식료, 평화를 위한 협력 등을 들고 자원과 에너지 문제, 지구환경 문제, 아시아의 삼립과 일본, 인구 및 식량문제를 집중 거론하였다. '2절 국제사회와 세계평화'에서는 지역주의 발생, 지역분쟁과 민족문제, 주권 국가와 국제사회, 국제연합, 세계평화의 실현 등 여러 주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일간의 '독도' 영토분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본서적 간행의 「우리들의 중화사회(공민분야)」에서는 관련단원이 '제4장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생을 위해'이다. '제1절 세계평화의 실현'에서는 현대의 국제사회, 전쟁을 포기한 일본, 평화헌법과 자위대, 일본과 아메리카 및 근린제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와 주권의 존중, 세계평화와 국제연합, 군축 및 평화에 관한 주제들을 다룬다. 금후의 근린제국과의 관계를 논하는 내용에서 '중군위안부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한편 '제2절 지구시대의 과제'에

서는 지구 환경, 빈곤 퇴치, 자원과 에너지의 미래, 세계 가운데 일본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영토분쟁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다.

일본문교출판 간행의 「중학생의 사회과 공민; 현대사회」교과서에서 관련단원은 제 7장이다. 1절의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국제연합, 군축,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각종 NGO, 일본 헌법과 평화주의, 비핵 원칙,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대, 사회개발 차원의 각종 원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2절의 '우리들과 지구사회'에서는 남북 및 남남 문제,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국경을 초월해 확산되는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자원 소비, 에너지 소비와 지구온난화, 자원과 에너지 재활용, 지구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다룬다. 한일 간의 독도 영토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청수서원 간행의 「신 중학교 공민; 일본의 사회와 세계」교과서에서는 제3편에서 국제사회 관련 내용을 다룬다. 국제정치, 국제연합, 군축과 세계평화, 자원, 남북 격차 등의 주제를 다루었지만, 한일 간의 영토분쟁으로 '독도' 문제를 직접 다룬 내용은 없다.

검토한 중학교 사회(공민분야) 교과서 5종 모두 한일 간의 '독도'를 사례로 한 영토분쟁 내용을 직접 다룬 교과서는 없다.

7.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

일본의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울릉도, 독도(죽도)에 대한 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판형이 적은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스케일의 지도를 소학교 사회과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며, 더욱이 민감한 쟁점사안을 취급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 검토된 교과서들 가운데 일부 교과서의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들이 등장하고 있다²³⁾.

IV. 결론: 일본 교과서의 죽도 표기에 대한 대응

일본 역사교과서에 한국과 관련한 역사왜곡의 심각성 못지않게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와 오늘의 주제인 '독도'의 '죽도'로의 표기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들

의 행동을 지켜보면 우리와의 역학관계를 보아가며, 한 가지 씩 들고나와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고 그들에게 유리한 판도로 끌고 가는 양상을 보인다.

역사왜곡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쟁점화 되어 피곤하게 하고 있으며,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가 그다음 불거진 썸이고, 가장 나중 불거진 문제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이다. 일본측에서는 쟁점화로 들어내기가 지 주도면밀하게 국제사회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판도로 이길 수 있는 시점까지 물밑작업을 철저히 해 놓는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그리고 적당한 때를 노리다가 충격적 카드로 한 문제씩 들이민다.

역사왜곡 문제와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문제는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의 독도에 대한 '죽도' 표기와 함께 영유권 분쟁으로의 치닫은 양상은 또 다른 우선적이고도 훨씬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정, 관, 학계와 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그야말로 그 장(場)이 현재이고 구체적이며,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나아가 역사왜곡의 쟁점에 대한 해계모니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일본은 일본의 교과서상에 독도를 '독도'로 표현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기울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고등학교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를 부각시켜 쟁점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부도 책들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해상에서의 국경선의 확정과 죽도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극히 소수의 일본 교과서(예; 동원서적)에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영유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측에서는 한국명이라고 한다는 주석을 달거나 괄호안에 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교과서는 그래도 꽤 양심적인 면이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언급조차 없이 그대로 일본영토 내의 일본의 '죽도'로 되어있다.

이러한 교과서상에서의 독도에 대한 '죽도' 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다음의 절차와 주장이 필요하다.

첫째, 그들의 주장이 억지가 되었던, 약간은 설득력

을 지냈던 간에 일본의 교과서와 지리부도상에 현재 양측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게재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일본의 양심있는 학자들과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이다. 나아가 교사용지도서에서나 참고자료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한국측의 입장과 일본측 입장을 소상히 밝혀 왜 이 부분이 쟁점화되며, 갈등을 빚는 이유를 알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의 장에서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마치 독도가 일본의 다케시마인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기술하는 것은 소수일지언정 일본 내의 양심 있는 교사와 학자들의 언론을 막는 것이며, 미래의 양식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의 성장을 막는 셈인 것이다.

둘째, 외교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키는 홍보작업과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배포하는 일은 한시도 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일본 측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 물질적 공세를 퍼붓고 외교적 전략을 줄기차게 펼치기 때문인데, 우리 정부에서 잘못 판단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보고만 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셋째, 국내의 학자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연구물을 축적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은 우리 영토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기에 적합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²⁴⁾.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외부세계에서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대응논리가 없는 것처럼 비쳐지거나 우리측 논리가 없거나 약한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반복되면서 물량공세를 취하는 일본측의 억지 목소리는 기정사실화된 공인된 목소리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들릴 수 있게 되고 서서히 우리측의 주장과 입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만일 묵시적인 태도로 일관된다면 국내의 우리 국민과 학생들조차 의아하게 여기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넷째, 정부측에서도 취해야 할 태도가 분명히 있다. 즉, 잘못된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보완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나아가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

역을 선포하고, 우리 국민이 우리영토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입도 허가제를 폐지해야 하며, 어업전진기지로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을 치루며 국토를 수호해 내는 일 만큼이나, 외교적 역량을 쌓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일과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 나아가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계몽시키는 일들이 역시 중요하다.

주

- 1) '독도' 영유권 문제 발생 배경; 일찍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 군함들이 동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에서 일본 해군 망루를 설치하려고 1905년 2월 한국인들과 당시의 대한제국 정부 몰래 독도 침탈을 기도한 적이 있다.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주인없는 땅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면서,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 도근현(島根縣, 시마네현)에 이른바 '영토 편입' 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에 의거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반환하였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 선포')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10일 뒤인 1월 28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알려진 섬에 대해 영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여 오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토논쟁'이 불분개 되었다. 그후 일본정부는 간헐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꾸준히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한국의 독도 영유에 대한 항의 문서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외무부에 보내어 뒷날 독도 침탈을 위한 근거 자료로 축적해 오고 있다.
- 2) 필자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의 교과서(주로 사회과 교과서 및 지도류)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속에 한국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정책사업에 전념한 바 있다.
- 3) 한국교육개발원, 2002, 세계화시대의 한국바로알리기;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과 그 대응-회고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2002-38), pp.57-60.
- 4) 그러나 이어서 다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국제분쟁과 민족문제를 다루는 장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과정상 한국과의 독도 분쟁문제, 북방영토문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尖閣諸島문제 등을 교과서별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 5) 필자는 15권의 지리부도를 검토하였다. 이 밖에 일본의 각 출판사에서 간행한 지도류는 부지기수이지만 자료구득 및 연구 기간 등을 감안해 일본내의 지리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높은 두 곳 출판사 즉 이궁서점(8종)과 제국서원(5종), 그리고 동경서적(2종) 간행의 지리부도를 살폈다; 二宮書店, 평성15년, 基本地圖帳; 二宮書店, 평성13년, 基本高

- 等地圖; 二宮書店, 平成14年, 基本高等地圖; 二宮書店, 平成15年, 高等地圖帳; 二宮書店, 平成15年, 高等地圖帳, 最新版; 二宮書店, 平成16年, 現代地圖帳; 二宮書店, 平成13年, 詳解現代地圖; 二宮書店, 平成16, 必携コンパクト地圖帳; 帝國書院, 平成13年, 地歴高等地圖; 現代世界와 그 歷史의 背景, 最新版; 帝國書院, 平成13年, 新編標準高等地圖, 最新版; 帝國書院, 平成16年, 標準高等地圖; 지도로 읽는 현대사회, 新訂版; 帝國書院, 平成13年, 新詳高等地圖, 初訂版; 帝國書院, 平成15年, 新詳高等地圖, 最新版; 東京書籍, 平成13年, 新高等地圖; 東京書籍, 平成15年, 新高等地圖.
- 6) ·삼성당, 정치·경제, 개정판, 2002년, 永井憲一 외 6명, 지도에 일본령 죽도 표기.
 - 삼성당, 정치·경제, 2004년, 中川淳司 외 6명, 55쪽에 일본령 죽도 표기.
 - 山川出版社, 현대의 정치·경제, 2003년, 山崎廣明 외 6명, 67쪽에 일본령으로 죽도 표기.
 - 山川出版社, 현대의 정치·경제, 2002년, 山崎廣明 외 6명, 89쪽에 일본령으로 죽도 표기.
 - 第一學習社, 고등학교 정치·경제, 平成15년, 阪上順夫 외 14명, 73쪽에 일본령으로 죽도 표기.
 - 第一學習社, 고등학교 정치·경제, 平成14년, 阪上順夫 외 14명, 87쪽 본문 가운데 한국과는 죽도 문제가 미해결의 영토문제로 남아있다고 기술.
 - 桐原書店, 신정치경제, 平成15년, 야중준언 외 5명, 71쪽 지도에 죽도 표기 후 괄호 안에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자국영토로 주장하고 있다고 적음.
 - 7) 일반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적고 있는 일본의 다른 정치경제 교과서들과 유일하게 차별화되는 교과서이다.
 - 8) 형기주, 2005, 독도의 지정학, 대한지리학회·조선일보사 주최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1쪽.
 - 9)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인데 1906년 3월 28일야야 일본의 오기섬 도사(島司) 아즈마(東文輔)와 사무관 간사이(신서유태랑) 등이 울릉도 군수를 찾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일행이 시찰차 왔다는 것, 총 거주 인구가 얼마나 되고, 경비는 얼마나 드는가를 조사하고 돌아갔다. 이 사실은 당시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 내무대신 이지용에게 보고되었다.
 - 10) 카이로선언문, 포츠담선언문, 일본의 항복문서 등의 원문은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 논쟁”(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에 부분적으로 실려 있다. 형기주, 독도의 지정학,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서도 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1) 신용하 교수의 같은 책에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원문이 게재되어 있으며, 제 3조에는 일본의 영토규정에 대마도와 죽도가 포함되어 있고, 초안 주석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문 원문이 실려 있다. 이것이 대일강화조약 제6차 초안이다.
 - 12) 다음의 세 권을 집중 검토하였다.
宮原武夫 외 15인, 平成15년, 高校日本史A, 實教出版.
青木美智男 외 13인, 1999년, 明解 日本史A(개정판), 三省堂.
宮原武夫 외 15인, 平成15년 검정제, 高校日本史B, 實教出版.
 - 13)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사나 일본 세계사 교과서상에서의 고대사, 중세사 등 과거사를 다루는 교과서상의 지도에 ‘일본해’라는 지명이 한결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국명은 ‘일본’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표기하고 있음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소지를 주고 있다.
 - 14) 다음의 교과서에서 한반도 지도가 등장하고, 일본해로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竹内理三·鈴木成高 외 4명, 소화54년, 중학교사회과 역사, 최신판, 帝國書院.
兒玉幸多·井上光貞 외 20명, 소화53년, 중학교사회 역사적분야, 日本書籍株式會社.
北島正元·佐藤 竺·野村正七 외 23명, 소화53년, 신판중학교 역사적분야, 教育出版株式會社.
 - 15) 소위 ‘임나일본부’ 설이란 일본의 우익 사회학계에 주장하는 바, 군사적 정복에 의한 지배기구로서 과거 한국의 남해안에 임나일본부가 있었으며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한일관계사 서술에서 일본측의 고토회복 차원에서 한반도 침략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의 예이다.
兒玉幸多·井上光貞 외 20명, 소화53년, 중학교사회 역사적분야, 日本書籍株式會社, p.39의 우측상단의 지도.
北島正元·佐藤 竺·野村正七 외 23명, 소화53년, 신판중학교 역사적 분야, 教育出版株式會社, p.42의 좌측상단지도, p.45의 상단우측지도.
 - 16) 北島正元·佐藤 竺·野村正七 외 23명, 소화 53년, 신판중학교 역사적 분야, 教育出版株式會社, p.249의 우측상단지도.
 - 17) 일본정책연구센터, 2005, 이것이 이상한 중국·한국 역사교과서.
18) 본 내용은 2005년 최신판 중학교 국사교과서에도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다.
 - 19) 일본정책연구센터, 2005, 여기가 이상한 중국·한국 역사교과서, 7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독도 교육’.
 - 20) 인용문은 최근(2005)의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내용이 같다.
 - 21) 일본정책연구센터, 2005, 앞의 책 7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독도 교육’.
 - 22) 二宮書店, 帝國書院 등 지리교과서 시장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름 있는 주요 5개 출판사 교과서를 택하였다.
 - 23)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가 나타난 교과서들은 다음과 같다.
大野 連太郎 외 26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토지와 인간 4下, 中教出版, p.26, 31, 38.
大野 連太郎 외 26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국토와 인간 5下, 中教出版, p.87.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日本書籍株式會社, p.93.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日本書籍株式會社, p.69.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日本書籍株式會社, p.45, 49, 64-65사이의 색지 지도.
 - 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독도 학습자료’를 책자와 CD로 개발, 배포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활용토록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매우 중요하며,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慎鋪廈, 2002, 신용하 저작집38 獨島領有權에 대한 日

本主張批判, 서울대학교출판부.

大西俊輝, 권오엽 옮김, 2004, 獨島, 제이앤씨.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한일관계사연구회, 1996,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61, 獨島研究 (보고논문총 96-1).

大韓公論社, 1965, 獨島.

신용하, 1997,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신용하, 1997, 독도(獨島), 보배로운 한국영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지 식산업사.

타와라 요시후미(俵 義文), 2001, 위험한 교과서, 일본 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옮김.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 · 역사교육연구회(일본), 2001,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사)동해연구회, 2001, 제7회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악"을 둘러싼 활동소개자료집; 일본의 역 사교과서문제와 교육의 우경화를 중심으로.

형기주, 2005, "독도의 지정학", 대한지리학회와 조선일보사 주최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 론회 자료집.

(지리부도류)

二宮書店, 평성 15년, 基本地圖帳.

二宮書店, 평성 13년, 基本高等地圖.

二宮書店, 평성 14년, 基本高等地圖.

二宮書店, 평성 15년, 高等地圖帳.

二宮書店, 평성 15년, 高等地圖帳, 最新版.

二宮書店, 평성 16년, 現代地圖帳.

二宮書店, 평성 13년, 詳解現代地圖.

二宮書店, 평성 16년, 必携コンパクト地圖帳.

帝國書院, 평성 13년, 地歴高等地圖; 現代世界와 그 歷史的背景, 最新版.

帝國書院, 평성 13년, 新編標準高等地圖, 最新版.

帝國書院, 평성 16년, 標準高等地圖; 지도로 읽는 현대 사회, 新訂版.

帝國書院, 평성 13년, 新詳高等地圖, 初訂版.

帝國書院, 평성 15년, 新詳高等地圖, 最新版.

東京書籍, 평성 13년, 新高等地圖.

東京書籍, 평성 15년, 新高等地圖.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中村和郎 외 7인, 평성 16인, 즐겁게 공부하는 世界地理B (最新版), 帝國書院.

高橋 彰 외 7인, 평성 16년, 高等學校 新 地理A (最新版), 帝國書院.

矢田 俊文 외 9인, 평성 6년, 환경과 인간: 지리A, 東京書籍.

山本正三 외 18인, 평성 13년, 기본지리A, 평성13년, 二宮書店.

竹内啓一 외 9인, 평성 15년, 지리A, 教育出版株式會社.

石井素介 · 奥田義雄 외 8인, 평성 14년, 地理A (改訂版), 教育出版.

矢田俊文 외 10인, 평성 14년, 지리A, 東京書籍.

石井素介 · 奥田義雄 외 8인, 평성 6년, 地理A, 教育出版.

山本 茂 외 14인, 평성 15년, 高교현대지리A; 현대세계의 동향과 제지역의 과제, 清水書院.

矢田俊文 외 10인, 평성 15년, 지리A, 東京書籍.

矢田俊文 외 8인, 평성 14년, 환경과 인간, 東京書籍.

山本 茂 외 13인, 평성 6년, 현대지리B; 지구적 시야로 본 오늘의 세계, 清水書院.

矢田俊文 외 10인, 평성 6년, 지리B, 東京書籍.

矢田俊文 외 8인, 평성 14년, 지리B, 東京書籍.

山本 茂 외 13인, 평성 13년, 현대지리B; 지구적 시야로 본 오늘의 세계 (개정판), 清水書院.

山本 茂 외 8인, 평성 14년, 신지리A (개정판), 清水書院.

市川 正巳 외 8인, 소화 62년, 고등학교 지리(개정판), 清水書院.

山本正三 외 13인, 평성 14년, 고교생의 신지리A, 평성 14년, 二宮書店.

山本正三 외 13인, 평성 15년, 고교생의 신지리A, 평성 15년, 二宮書店.

山本正三 외 13인, 평성 13년, 고교생의 신지리A, 평성 13년, 二宮書店.

山本正三 외 13인, 평성 13년, 고교생의 지리A, 二宮書店.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

永井憲一 외 6명, 2002년, 정치·경제(개정판), 三省堂.

中川淳司 외 6명, 2004년, 정치·경제, 三省堂.

山崎廣明 외 6명, 2002년, 현대의 정치·경제, 山川出版社.

山崎廣明 외 6명, 2003년, 현대의 정치·경제, 山川出版社.

阪上順夫 외 14명, 평성 15년, 고등학교 정치·경제, 第一學習社.

阪上順夫 외 14명, 평성 14년, 고등학교 정치·경제, 第一學習社.

野中俊彦 외 5명, 평성 15년, 신 정치경제, 桐原書店.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青木美智男 외 13명, 2003년, 明解日本史A(개정판), 三省堂.

青木美智男 외 12명, 평성 15년, 일본사A, 三省堂.

宮元茂夫 외 10명, 평성 6년, 實教出版, 高교일본사B, 實教出版.

家永三郎 외 5명, 2001년, 신일본사B, 三省堂.

門脇楨二 외 5명, 소화 62년, 高교일본사(三訂版), 三省堂.

宮原武夫 외 15인, 평성 15년, 高校日本史A, 實教出版.

青木美智男 외 13인, 1999년, 明解 日本史A(개정판), 三省堂.

宮原武夫 외 15인, 평성 15년 김정제, 高校日本史B, 實教出版.

(중학교사회 역사분야 교과서)

竹内理三·鈴木成高 외 4명, 소화 54년, 중학교사회과 역사, 최신판, 帝國書院.

兒玉幸多·井上光貞 외 20명, 소화 53년, 중학사회 역사적분야, 日本書籍株式會社.

北島正元·佐藤 竺·野村正七 외 23명, 소화 53년, 신 판중학사회 역사적 분야, 教育出版株式會社.

(중학교사회 공민분야 교과서)

佐藤幸治 외 8인, 평성 15년,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大阪書籍.

阿部 齋 외 41인, 평성 15년, 중학사회 공민, 教育出版.

谷本美彦 외 6인, 평성 15년, 사회과 중학생의 공민, 帝

國書院.

田邊 裕 외 37인, 평성 15년, 새로운 사회 공민, 東京書籍.

堀尾輝久 외 15인, 평성 15년, 우리들의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日本書籍.

伊東 光晴 외 11인, 평성 15년, 중학생의 사회과·공민; 현대사회, 日本文教出版.

中村研一 외 12인, 평성 15년, 신 중학교 공민; 일본의 사회와 세계, 清水書院.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

大野 連太郎 외 26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국토와 인간 5下, 中教出版.

大野 連太郎 외 26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토지와 인간 4下, 中教出版.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 5上, 日本書籍株式會社.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 5下, 日本書籍株式會社.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 4下, 日本書籍株式會社.

최초투고일 : 2005. 11. 02.

최종접수일 : 2005. 12. 05.

교신 : 손용택, 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계열
(sohn@aks.ac.kr, 031-709-5761)

Correspondence : Yong-Taek Sohn, sohn@aks.ac.kr